



HEADLINE NEWS

수변문화 「르네상스」를 위한
‘2050 비전’ 수립 (포틀랜드)

포틀랜드市는 현재 윌라미트江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장기 전략인 「수변문화 부흥계획 (River Renaissance)」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는 미래상 정립 계획은 인근의 산업·생태 서식지·업무·근린지구 등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자연하천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市는 수변문화 부흥을 위한 ‘2050 비전’ 설계를 위해 기존의 계획안을 수정하고, 새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윌라미트江의 남·북부와 중심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6번의 워크숍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역사적 의미가 있는水路를 따라 운항되는 선박에 시민을 승선시켜 「수변문화 부흥계획」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를 높이며 셋째,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www.planning.ci.portlans.or.us/River_site/Layers.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임해부도심의 IT기업 유치와 토지매각 추진 (동경)
- ② 「뉴욕타임스」 사옥 ‘지방문화재’ 지정 추진 (뉴욕)

도시환경

- ③ 배기가스 과다차량 신고제 실시 (오클랜드)
- ④ 수은주온도계 판매 금지 (보스톤)
- ⑤ 도심하천 운항선박의 오수제거용 저장소 설치 (베를린)

도시교통

- ⑥ 「511」 전화번호 첨단교통정보제공에 배정 (미국 도시)
- ⑦ 교통혼잡지역내 화물차량 주차료 부과 (뉴욕)
- ⑧ 보행자안전 위해 횡단보도에 ‘형광’ 표지판 설치 (애틀랜타)
- ⑨ 교통량 급증시간대 불법주차 범칙금 2배로 인상 (워싱턴 D.C.)
- ⑩ 市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런던)

사회복지

- ⑪ 「식품기부」 운동 전개 (뉴욕)
- ⑫ 청소년 약물남용 막기 위해 TV 프로그램 제작 (홍콩)

행재정

- ⑬ 시민단체와 연계, 외국인 안내·상담창구 개설 (토요나카市)
- ⑭ 「정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나가사키縣)
- ⑮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주력업종’ 선정 (상해)

① 임해부도심의 IT기업 유치와 토지매각 추진 (동경)

東京都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임해부도심 지구의 기업 유치와 미이용 토지의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都는 이를 위해 ‘알선·중개제도’를 도입하고, 초기에는 임해부도심 지구의 토지와 재무국 소관의 미이용 토지, 타마 신도시의 미처분 토지를 처분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都는 또한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무역상사, 통신회사 등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유치촉진본부’를 설치, 민간기업과의 ‘정보교류회’ 개최, 토지처분·이용 계획 및 전략 수립,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都는 연내에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기업유치 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IT 관련 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11. 2) (www.toseishimpo.co.jp/news/bn00/bn001107.html)

② 「뉴욕타임스」 사옥 ‘지방문화재’ 지정 추진 (뉴욕)

뉴욕市는 「뉴욕타임스」 본사건물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본사건물은 맨해튼에 위치한 근대건축물로서, 1913년 건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증축되었다. 市가 이 건물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건물의 역사성과 건축적인 가치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옥에서 통산 22회의 대통령선거와 제1·2차 세계대전을 보도해 왔으며, 백색 벽돌과 테라코타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뉴욕타임스」 사옥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입면(立面)의 변경이 전면 금지된다. 市는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해 현재 새 사옥을 건립,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 「뉴욕타임스」社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www.nytimes.com/pages/nyregion/index.html)

③ 배기가스 과다차량 신고제 실시 (오클랜드)

미국 오클랜드시는 최근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과다차량 신고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시는 아울러 대기오염 발생원인과 차량배기가스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대상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차량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과다차량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노후된 개인차량의 보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www.smokey.org.nz/frame.htm)

④ 수은주온도계 판매 금지 (보스톤)

보스톤시 의회는 최근 수은주온도계를 소각 또는 매립할 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 수은주온도계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수은주온도계 1개당 약 0.7그램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데, 수은은 워낙 독성이 강해 수은 1그램이면 20에이커의 호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뉴햄프셔주가 최초로 지난 7월 수은주온도계의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 앤 아버, 둘루스 등의 도시가 수은주온도계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The New York Times, 11. 15)

⑤ 도심하천 운항선박의 오수제거용 저장소 설치 (베를린)

베를린시는 최근 도심하천을 운항중인 선박들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오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쉬판다우 지역 하펠강변의 2km 구간에 오수를 저장할 수 있는 상설저장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하펠강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저장소를 이용해 오수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저장소는 승객수송용 선박뿐만 아니라 유람선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설저장소에 모인 오수는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오수수거선박이 저장소에 관을 투입해 수거해온다.

(www.berlin.de/home/Land/Pressemitteilungen/Senat/200010/20001004a4)

6 「511」 전화번호 첨단교통정보제공에 배정 (미국 도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하는 「911」, 전화번호를 문의할 때 이용하는 「411」 등과 같은 「N11」 전화번호 계열인 「511」을 첨단교통정보(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는 전용 전화번호로 배정했다. 미국 첨단교통분야(ITS)에서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첨단교통정보분야가 연방정부가 아닌 州 정부나 지방정부 관할로 옮겨지게 되었다.

앞으로 州 정부나 지방정부는 「511」 전화 서비스를 통해 첨단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첨단교통정보분야를 더한층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5년간 유효하며, 5년 후에는 다시 FCC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Traffic Technology International, 8·9월호)

*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1934년에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미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FCC는 전화, TV, 라디오, 무선통신망, 인공위성 및 케이블 방송에 이르기까지 통신분야 전반을 관장한다.

7 교통혼잡지역내 화물차량 주차료 부과 (뉴욕)

뉴욕시는 최근 교통이 가장 혼잡한 중부 맨해튼지역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위해 주차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11월 3일부터 18개월간 시험적으로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 동안 화물차량이 '하역구역(Loading Zone)'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화물차량이 아닌 차량들도 주차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화물차량들이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일종의 '혼잡료'를 부과기로 한 것이다.

주차료 부과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요금은 시간비례가 아닌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이는 가능하면 화물차량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고, 하역 및 주차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11. 3)

8 보행자안전 위해 횡단보도에 ‘형광’ 표지판 설치 (애틀랜타)

애틀랜타시는 최근 보행자, 학생,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의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다 식별이 용이한 ‘밝은 황록색 형광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대상 표지판은 보행자 및 자전거 횡단보도 그리고 학교 앞에 설치된 표지판 등이다. 그 동안 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안전 프로그램(Pedestrian Safety Program)」을 적극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표지판 교체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와 차량 감속운행, 그리고 시민 안전 향상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www.ci.atlanta.ga.us/mayor/press/detail/3m.htm)

9 교통량 급증시간대 불법주차 범칙금 2배로 인상 (워싱턴 D.C.)

워싱턴시는 현재 불법주차 범칙금을 기존에 비해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량이 급증하는 오전 7시에서 9시 30분까지, 오후 4시에서 6시 30분까지 불법주차 범칙금을 기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여부는 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올 연말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51950-2000Oct21.html)

10 市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런던)

런던시는 2002년부터 시 진입차량에 대해 하루 7.5파운드에 달하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1주일에 5일씩 런던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연간 2,000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징수한 「혼잡통행료」를 런던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런던 인접 자치지역은 반대하고 있다.

(Traffic Technology International, 8·9월호)

🇺🇸 「식품기부」운동 전개 (뉴욕)

뉴욕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식품기부(City Harvest)」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소방서, 파출소, 교회, 학교, 레저시설 등 지정된 기부처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쉽게 상하지 않는 통조림 식품을 기부 받고 있다. 시는 현재 매년 2백만 파운드 이상의 식품을 모아 500여 개의 긴급구호기관을 통해 매주 14만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www.ci.nyc.ny.us/html/om/html/2000b/pr426-00.html)

🇭🇰 청소년 약물남용 막기 위해 TV 프로그램 제작 (홍콩)

홍콩시는 약물퇴치사업의 일환으로 홍보 및 교육용 TV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약물의 위해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11월부터 ‘약물퇴치기금(Beat Drugs Fund)’에서 약 50만 달러를 TV 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제작될 TV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제 약물남용사례에 대한 청소년 리포터의 취재 및 보도, 약물관련 정보센터 및 재활시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약물관련 퀴즈 진행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의 홍보 프로그램과는 달리 재미와 현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홍보 및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www.info.gov.hk/gia/general/200011/01/1101229.htm)

④ 시민단체와 연계, 외국인 안내·상담창구 개설 (토요나카市)

일본 오사카(大阪)부 토요나카(豊中)시는 지난 10월 市청사 문화국제과 내에 외국인 전용 市政 안내·상담창구를 개설했다. 市는 이 창구에 市 소재 국제교류 관련 NPO(특정비영리단체)에서 파견된 상담원을 배치하고 시청방문 외국인들에게 복지·보건·교육 등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원이 해당 부서까지 직접 안내, 통역도 해주고 있다.

(www.senri-i.or.jp/toyonaka/kohotext/200010/html)

④ 「정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나가사키縣)

일본 나가사키縣은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약 2,500건의 예산사업 중 인건비, 국공채비 관련항목 등을 제외한 약 2,40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올 연말에 시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실제 「정책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를 100% 이상, 50~100%, 50% 이하의 3단계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에 따른 「필요성」과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 본 「효율성」, 「유효성」, 「공평성」, 「시급성」의 5개 평가항목도 3단계로 판정하게 된다. 평가는 사업 착수 전과 사업 진행 중, 사업 종료 시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담당과에서 1차 평가를 한 후 市長이 참여하는 「정책회의」에서 최종판정을 하게 된다.

(西日本新聞, 10. 25)

⑧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주력업종’ 선정 (상해)

상해市는 지난 10월 25일 「상해 정보산업 2001년도 계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IC·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 통신·네트워크 및 디지털 제품, 정보서비스업을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육성분야로 선정했다. 市는 이날 회의를 통해 IC 설계 및 생산거점 설립을 가속화하고, ‘닷컴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컴퓨터·통신·가전제품의 개발과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통해 컴퓨터업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풍부한 인력을 기반으로 중국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그리고 수출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정보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정보 네트워크의 정비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市는 이를 통해 상해市를 전자상거래의 중심지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人民日報, 10. 26)